太平洋전쟁희생자 보상청구운동 활기

유족회 10월 日法院제소 준비

亞太변호사협회등 訴訟대리인

유족회원7,000여명 위임장맡겨

日 政府 강제징용자 숫자 안밝혀 걸림돌

일제의 강제징용징병으로 끌려가 숨진 한국인 희생자 유족회원들이 日本으로 하여금 사죄하고 배상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이 태평양전쟁 종전및 해방 45주년을 맞아 확산되고 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회장 裵海元·53)는 지난 71년창립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벌여온 준비작업을 토대로 오는 10월경 희생자피해배상청구소송을 戰犯國 일본을 상대로 일본법정에 제기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배상청구재판은 양국정부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묵시적으로 양해했던 사안을 민간차원에서 나서서 전면 재평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소송의 승패여부를 떠나 그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소송을 앞둔 현재 1만2천여명의 가입회원(유족)중 7천여명으로부터 소송 위임장을 받아놓고 있다.

유족회관계자들은 소송대리인으로 일본인 자원 변호사들과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 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한 변호인단등 양국의 변호사를 열두에 두고 있다.

유족회는 후 국내의 거의 얻지못한 상태에서 「덥석 소송」하기보다는 일본인 민간 사회단체가 베푸는 온정에만 의존하면서 근근이 사업을 꾸려왔다.

이와관련, 유족회는 두가지 고민을 안고 있다.

하나는 가해자 일본을 상대로한 소송절차에서 일본인 변호사협회 李丙昊변호사는 배상청구재판의 당위성에 대해 『애당초부터 잘못된 한일협정으로 한국인 희생자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제대로 배상을 받지못하는것은 지난 77년 소송투쟁을 통해 보상을 받는 대만의 경우와 줄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는 일본인소송대리인들에 의한 소송절차의 공정성여부. 비록 「양심적이고 헌신적인」 일본인변호인단이 지만 일본의 자국이해에 어느만큼 초연할수 있겠는냐는 점이다.

유족회는 당초 8월중으로 예정됐던 소송을 약간 지연시킨채 최근 전국도보행진과 일본대사관앞 시위등으로 다소 고양된 일반의 관심속에서 일부 국내 법조인들의 호의적인 태도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 상태다.

유족회가 소송준비작업을 자체점검하기위해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대일 사죄및 배상 청구재판 설명회」에 참가한 아시아태평양 변호사협회 李丙昊변호사는 배상청구재판의 당위성에 대해 『애당초부터 잘못된 한일협정으로 한국인 희생자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제대로 배상을 받지못하는것은 지난 77년 소송투쟁을 통해 보상을 받는 대만의 경우와 줄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 1990. 08. 21.

대만의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들은 지난77년 1인당 5백만엔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東京지방재판소에 제기, 82년과 85년 각각 1, 2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87년 9월 일본 의원입법으로 전몰 전상자 3만여명이 93년 3월까지 2백만엔씩 지급받게 되자 일본 京都 烏丸법률사무소 소속 「오노(小野)」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일본재판부로 하여금 일본의 잘못을 인정 토록해 배상을 받아내는 것 외에도 재판과정에서 일본의 만행을 일본사회에 일깨우는 계기가 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梁이사는 『명단공개촉구와 함께 실질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朴允錫기자〉